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전략을 위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중단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야하며, 이런 의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전략으로 손꼽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방향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협회 김태희 부회장에게 들어보자.



글 / 김 태 희 (협회 부회장)

전 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그램 마련이 한창이다. 그 중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클러스터 구축은 지자체별로 산발적 혹은 중복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서로의 성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지속 혁신 클러스터의 조율이 이루어져야겠다.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성패는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속혁신 클러스터의 중요성

국가균형발전은 크게 영토, 국민, 주권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영토차원의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어느 지역에서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국민차원의 균형발전은 국민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권차원의 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과 주민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 클러스터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혁신은 체제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업의 혁신체계 구축은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변화하였고, 집권체계 역시 중앙집권에서 지역분권화로 바뀌면서 지역중심의 발전체계가 이루어졌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혁신'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실리콘밸리, 오사카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립적인 지역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조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지역혁신체제의 문제점과 구축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체제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지역혁신이 지역의 특성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은 사업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자금의 분산과 소규모 지원으로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학·연의 연계 역시 취약해 혁신율이 낮고 연구개발과 생산현장이 격리되어 있어 상호연계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중복을 해소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네트워크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산·학·연과 유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70%가 집중된 것을 보면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는 혁신주도형 정책,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간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계획적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산·학·연 지원 기관을 통해 우수한 기관을 유치하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며, 신뢰 구축을 통해 지역내 인재 양성과 정착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에서 지역이 특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정책이 통합된 지역혁신정책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 내에 집행기구 역할이 용화되어야 하겠다.

중소·벤처기업과 지역혁신

결론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내 경제 주체들이 지역의 생산 과정과 제도 개혁,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 집약적이고, 상대적으로 산·학·연 관계가 긴밀하다. 따라서 지역 R&D의 핵심 주체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 및 지역 혁신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역·산업·문화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과 융화되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기술적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해 제도나 환경적 측면에서 혁신이 빈번히 발생하는 체제를 갖춘다면 과거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역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의 늪에서 10여 년간 헤어나지 못하는 이때에 지방벤처의 성장·발전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지식강소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혁신'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실리콘밸리, 오사카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립적인 지역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조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